

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 현황 및 향후 정치경제 전망

- 반정부 시위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미래 결정 -

'14. 1. 31(금)
모스크바사무소

1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배경 및 현황

- '13. 11월,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(Viktor Yanukovich)의 EU 경제협정 추진 중단 및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 결정으로 시위 시작
 - '14. 1. 16일 특정 집회 및 반정부 시위에 대한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는 집회시위 규제법이 통과되면서 시위대와 공권력간 유혈 충돌사태로 확대
 - '13. 11. 24일(Vulitsya Hrushevskoho) 및 12. 1일(Bankovaya Vulitsay) 시위를 제외하고,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시위 규제법 통과 이후 폭력시위로 확대
 - '14. 1. 22일, 반정부 시위대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1. 21일에는 '우크라이나 총기소지자협회'가 시위대를 대상으로 총기사용을 허가하는 정부 방안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내무부 앞 공식 항의
 - 로이터는 '14. 1. 29일 현재까지 반정부 시위대 6명이 사망하고, 경찰 및 시위대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힘.
 - 반정부 시위대의 1. 24일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점거 및 법무부 점거 등 1. 24~28일간 3차례의 정부건물의 점거 상황 발생
 - 우크라이나 법무부장관은 1. 27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필요성을 언급

- '14. 1. 23일,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요구, 유혈사태 해소를 위해 야권과 협의 가능성 시사
 - '14. 1. 28일, 미콜라 아자로프(Mykola Azarov) 총리 사임, 내각 총사퇴 및 집회 시위 규제법 폐기안 발표
 - 전 중앙은행장 출신인 제 1부총리 세르히 아르부조프(Serhiy Arbuzov)가 총리 대행을 하고,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 현 내각이 유지될 전망
 -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전 경제부장관 및 야당 대표인 아르센니 야센류크(Arseny Yatsenyuk)의 총리직 임명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함.
 - 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여 현 유혈사태를 진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야당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,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
우크라이나 사태 일지

일 자	주요 사건
'13. 11. 21	EU와 경제협정 추진 중단 선언
'13. 11. 23	EU와 경제협정 중단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시작
'13. 12. 2	우크라이나, EU 앞 협상 재개 요청
'13. 12. 15	EU, 우크라이나와 협상 잠정 중단 선언
'13. 12. 17	러시아-우크라이나 정상회담 - 러시아,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하 및 150억 달러 차관 제공 합의
'14. 1. 16	집회 시위 규제법 통과
'14. 1. 22	반정부 시위대 첫 사망자 발생
'14. 1. 28	- 아자로프 총리 사임, 내각 총사퇴 및 시위 규제법 폐기 - S&P, 우크라이나 신용등급 하향 조정(B- → CCC)

2 우크라이나 정치·경제 전망

□ 반정부 시위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향후 정치·경제 영향

- 아자로프 총리 사임에도 불구하고, 반정부 시위 종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 - 아자로프 총리는 '13. 11월 EU와의 경제협정 중단을 지지하고 러시아와의 경제동맹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로, 아자로프 총리의 사임은 반정부 시위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,
 - 야당측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임 및 반정부 시위로 구속된 인사에 대한 사면과 함께 오렌지 혁명으로 달성한 '04년 헌법의 원상 복구 개정* 등을 요구하고 있어, 반정부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.
- * 우크라이나는 '10년, 오렌지 혁명으로 달성한 '04년도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(3회 연임 가능 등)
- 반정부 시위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EU 경제협정 추진 중단 결정에 반대하여 시작되었지만, 현재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문제 및 비리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.

□ 우크라이나 정치문제의 본질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정부의 총리직 및 주요부처 장관직 제의에 대한 야권 수용 여부*, 야권의 요구사항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임 및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정부 수용 여부, EU와 경제협정 추진 재개 여부 등 핵심 현안과는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의 정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* 1. 27일, 야당 대표 야세뉴크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공식 거절
 -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최근 안드레이 크루예프(Andrei Klyuyev)*를 대통령 보좌 총괄로 임명하여 야당 대표**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총괄토록 하였으며, 야권 대표들도 동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* 안드레이 쿠르예프는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후, 야권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야권 약화를 주도한 인물

** 야권 대표 : 아르세니 야첸뉴크(Arseny Yatsenyuk), 올레 티하니보크(Oleh Tyahnybok), 비탈리 클리쉬코(Vitali Klitschko)

- 야권으로서도 반정부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부 앞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으며, 야누코비치 대통령 이후 국영정책에 대한 대안 또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이에, 차기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정치, 사회, 경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

□ 반정부 시위의 본질은 정치적 요인 外 경제·사회적 문제를 내포

○ 우크라이나 경제, 외채 증가 및 외환보유고 문제로 디폴트 위기 지속

- (대외채무 증가) 우크라이나 외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, '12년도 1,287억 달러(GDP 대비 69.9%)에 달함.
- (외환보유고 감소) 단기외채 상환 및 환율방어 등을 위한 달러 매도로 '12년 외환보유고는 '11년도 304억 달러 대비 약 18% 감소한 249억 달러에 그침.
- 우크라이나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→ 대외채무 증가 → 외부 충격 → 경기하강 →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증가 → 대외채무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* 지속

* '13년 GDP 규모가 '92년 대비 84%에 불과하는 역성장 시현

○ S&P,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등급 하향 조정(B- → CCC, negative outlook)

- S&P는 '14. 1. 28일 '정치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원조를 제공하겠다던 러시아의 약속*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'며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등급 하향 조정

* '13. 12월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정상회담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앞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및 천연가스 공급가격 30% 이상 인하 등의 경제원조를 약속한 바 있음.

- 한편,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. 28일 '야권 내각이 들어서도 경제 지원을 계속할 것'이라고 밝힌바 있음.

우크라이나 주요 경제 순위 지표

- 25년 전 구소련 및 동구권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 경제규모는 폴란드와 유사하였으나, '12년도 현재 우크라이나 GDP는 1,762억 달러로 폴란드의 4,898억의 1/3 수준
 - 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순위 : 84위/148개국
 -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orruption 순위 : 144위/175개국
 -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순위 : 112위/189개국

○ 우크라이나는 정치·문화 면에서 양분화되어 있으며, 지난 20년간 갈등 심화

- ※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서유럽과 가까운 서부지역과 러시아와 가까운 동부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있으며, 이들은 사고방식, 문화 및 언어가 서로 다름.
- 현재의 반정부 시위의 본질적인 이유는 과거 20년간 정치·사회적 양분화 및 취약한 경제구조에 기인
 - 우크라이나는 GDP 규모가 '92년도 대비 감소하여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과거 20년간 GDP가 축소된 지구상 유일한 국가
 -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의 2/3 수준이 동부 우크라이나의 Donetsk와 Dnepropetrovsk에서 나오고 있으며, 여타 지역은 경제 붕괴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.
 - 우크라이나 사회적 계층화(social stratification) 지수 순위는 '99년 29위에서 120위로 하락
-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표면적인 정치 이슈 해결뿐만 아니라 정치·문화적 양분화 해소, 법치주의(rule of law)의 확립, 정부의 현대화 및 강력한 경제기반 구축 등이 선결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

3 서방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황

□ 1. 29일, EU-러시아 정상회담 결과

○ 러시아, EU의 우크라이나 간섭에 대한 부정적 의견 표명

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EU-러시아 정상회담에서 'EU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'이며, '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'임을 표명
- EU는 '13년말 우크라이나가 EU와의 경제협정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하여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역조치 및 EU와 경제 협정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러시아를 비판한 바 있음.

○ EU는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,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임.

※ EU-러시아 관계는 EU의 ① 러시아 자동차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WTO 제소 및 ② 러시아 자원기업 Gazprom의 독점금지 관련 조사(antitrust probe) 제기 등으로 과거 '08년도 러시아-그루지야 갈등 이후 최악의 상황

- 러시아와 EU의 동부유럽에 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, 전문가간 협의를 통해 양측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

□ 한편,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

○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'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유와 평화 속에 자신을 표현하고 조국의 미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'고 밝힘.

-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

□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자국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, 서방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○ EU, 미국,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임.

4 러시아-우크라이나 관계 및 시사점

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앞 차관제공 지연 가능성

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차기 정부 이후에도 150억 달러 차관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,
 -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울류카예프(Alexei Ulyukayev)는 차관 제공 시기에 대하여 '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 및 정부 리스트럭처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'고 언급
 - 이미 30억 달러의 차관이 집행되었으며, 우크라이나는 추가 20억 달러의 차관 제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

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전략 부재 이슈 제기

- 러시아는 CIS국 통합이 목적이거나, 우크라이나의 경우 양분화된 국가의 통합 및 경제위기 해소가 우선 과제
 - 러시아의 150억 달러 차관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디폴트를 지연할 수는 있으나, 우크라이나 경제 및 정치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개선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
 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정치·경제적으로 안정화 될 경우 상호 이익 극대화가 가능하나,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CIS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짐.
- 러시아의 150억 달러 차관 제공의 악영향
 - 러시아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시 150억 달러의 차관 제공 및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, 우크라이나-EU간 경제협정 중단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,
 - 이는 '15년 대선을 앞둔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필요한 지원을 EU보다 적기에 해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

- 즉, 러시아의 150억 달러 차관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외환보유고의 단기적 안정화 및 정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, 장기적인 외부 불균형 해소는 불가능
-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현실 판단 오류 및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성 등을 과소평가한 대가로, 현재의 친러 우크라이나 정부의 붕괴 가능성 및 여타 CIS국의 러시아의 통제 강화 목적에 대한 경각심 확대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
- 이는 '04년도 우크라이나 대선 당시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지원하였으나, 선거의 부정과 조작설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을 유발, 러시아에게 득보다는 실이 컸던 상황과 유사

□ EU-우크라이나 경제 협정은 러시아에도 이익

- EU-우크라이나 경제 협정은 제로섬 게임(zero-sum game)으로 간주되어, 우크라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비춰진 바 있음.
-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규제 등의 조치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산 제품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 등으로 제기됨.
- 그러나, 다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수입규제 조치는 러시아가 가입된 WTO 규정 위반사항일 가능성이 높고, 유럽산 제품 수입 증가보다는 교역증가, FDI 증가 및 사회·문화 교류 확대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
- 실제 다수의 연구자료를 통해 EU-우크라이나 경제협정이 교역증가, 사회·문화 교류 확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혀짐.
- 예를 들어, 폴란드가 '04년도 EU에 가입한 후 대러 수출규모는 기존 4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, 우크라이나는 저임금 구조를 활용한 효율적인 러시아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우크라이나의 GDP 증가로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 증가 가능성

- EU-우크라이나 경제협정으로 개선된 투자환경에 따른 FDI 증가 효과 등

/끝/